

## 정부,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7월15일부터 시행 현상황 제2차 석유위기보다 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



제3차 오일쇼크가 눈앞으로 현실로 다가오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가계·기업의 고통분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7월6일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등을 포함한 고유가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위기 관리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이를 앞당겨서 우선 공공 부문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1단계 조치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승용차 홀짝제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사용 금지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의 심야시간대 가로등 격등제 등이다.

공공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물론 건물(37%), 조명(23%) 등 전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소비량을 1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배럴당 170달러를 넘을 경우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는 2단계

위기관리조치도 마련해 놓았다.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배급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에너지 절약 비상조치의 경우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3차 오일쇼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도 구체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별로 '에너지 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부서별 에너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를 감시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현대자동차는 2005년부터 에너지 절약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사내 공모를 통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등 지난해 1788건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 활동을 통해 총 61억1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가격이 높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설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분임조 활동을 통해 197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7월7일 전날 발표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 현 상황은 지난 1970년대 후반에 발생한 제2차 석유위기보다 더 심각한 에너지 상황이라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정책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자가 고유가에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을 당부하는 총리의 마음이 매우 무겁기 짝이 없다”며 특히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잘 협조해줘야 하겠지만 총리실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 유가 및 에너지 소비동향

### ▷ 국제유가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년평균대비 100%이상 상승하였으며, 지난 1주간 9.3%나 상승하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7월4일 두바이 유가는 140불을 상회(\$140.70/b)함에 따라 2차 석유 위기시의 실질실효유가 수준인 150불에 바짝 다가선 상태이다.

제2차 석유위기시의 유가(1980년 평균 \$36/b)를 물가상승률 및 석유의존도 등을 반영하여 환산하면 \$152/b 수준이다.

향후 유가 전망도 지속 상승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만이 하반기 안정세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향후 6~24개월내에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금년내 200달러 상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의 유가 수준 및 상승 속도만으로도 국민과

언론은 “제3차 오일쇼크”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주요 언론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강도가 약하다는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당초 150불 초과시 발동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조치를 앞당겨 시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 조치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 ▷ 에너지 소비

우리나라는 2004년 新고유가 이후 OECD 평균보다 높은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 1~5월중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5.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예년보다 추운 동절기의 영향으로 난방용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2008년 1~5월 석유제품 소비 감소(3.5%)는 초고유가로 LNG,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천연가스 및 전력 소비가 대폭 증가하였다.

20 '08년 1~5월 LNG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 전력 소비는 7.3% 증가했다.

특히, 휘발유(1.2% ↑), 경유(2.8% ↓) 등 수송용 수요감소는 미미한 반면, 납사(1.6% ↓), 병커C유(26.3% ↓) 등 산업용 수요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국제유가 추이]

구분	'07	'08.1-3	'08.4	'08.5	'08.6	08.7.1	08.7.2	08.7.3
Dubai油	68.43	91.30	102.54	119.50	129.90	136.56	136.73	140.31
WTI油	72.21	97.87	111.69	125.42	133.91	140.99	143.59	145.31

산업용 LNG 수요는 벙커C유 등 타 경쟁연료 수요대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으며, 화훼, 축산농가 등의 경유 대체 전기 난방 등으로 농업용 전력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비중 ('06년기준)]**

공공부문 (총소비의 3.7%)			민간부문 (총소비의 96.3%)			
수송 (40.1%)	건물 (37.2%)	조명 (22.7%)	산업 (58.2%)	수송 (20.3%)	상업 (8.7%)	주거 (12.8%)

## 2. 추진 방향

공공부문은 사회전체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 10% 감축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전체 에너지소비의 3.7%에 불과하지만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수송(공공부문 전체 소비의 40%), 건물(37%), 조명(23%) 등 에너지 이용 전 분야에 대해 핵심대책 위주의 고강도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민간부문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절약 조치를 권장한다는 것이다.

민간에 대한 강제적 절약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다.

석유수요와 직결된 수송분야(전체소비의 20%)와

불요불급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상업분야를 주대상으로 하여 고통분담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8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2007년대비 에너지원단위를 15%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도 7.5%를 절감하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선언했다.

## 3.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강제조치

### ▷ 세부대책

현재의 승용차 요일제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7인승 이상 관용 승합차 제외)한다. 현 관용차량(15,300대)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용차량의 운행 30% 감축한다.

건물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적정 실내온도를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나,

**[총에너지 소비 및 석유 소비 증가율 비교]**

구분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			석유 소비 증가율(%)**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OECD	0.7	-0.1	0.3	0.6	-0.7	-0.5
非OECD	6.1	6.3	5.5	3.0	4.1	3.8
중국	9.2	10.8	7.7	4.2	7.8	4.6
한국	3.5	1.0	3.0	1.4	-0.9	1.8
전세계	2.6	2.7	2.4	1.6	1.3	1.3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 IEA, Oil Market Report('08.6)

이를 여름철 27℃, 겨울철 19℃로 각각 1℃씩 조정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을 현재 3층이하 금지, 4층이상 격층운행에서 4층이하 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으로 강화한다.

조명의 경우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의 심야 시간대(23:00~익일 일출시) 부분 소등(가로등 격등제)한다.

### ▷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시행시기와 관련, 즉시 시행가능한 조치는 바로 시행하고, 승용차 홀짝제는 출·퇴근 보완대책 등을 마련후 7월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방법은 7월7일 국무총리 특별지시「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로 시달했다.

한편, 이 대책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정부 43개, 지자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 등 총 819개 기관이 해당된다. 다만, 국회, 법원, 청와대는 제외되나, 청와대는 자체 지시로 시행할 계획이다.

## 4.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권장

승용차 자율 요일제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의 통근버스 사용, 카풀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물부문에 있어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를 권고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규모 업무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중 목욕탕 등의 격주 휴무,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영업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조명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의 옥외간판 및 조명 사용을 자제토록 할 예정이다.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의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 시설의 1/2만 사용토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대형점포(3,000㎡이상)의 외부전사용 조명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 진열장 조명의 영업시간외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과 사치성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조명사용을 자제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권고사항이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의 전환도 검토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투자확대 지원을 위해 세제감면 확대 등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총리,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학계, 정계, 재계 등의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 이행조치사항 점검, 수급동향 분석점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도입 검토 등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 5.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정부는 앞으로 4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원협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총리는 중앙아 순방에 이어 하반기에는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정상급 에너지 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다.

산업·인프라 협력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투르크 3개 해상광구 공동개발 등 총리 중앙아 순방성과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

하고 있다.

또 이라크 등 전략 협력국가의 최고위 인사를 초청하고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여타 자원부국에 대해서도 고위급 자원협력을 추진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원보유국과의 상시적 협력채널인 자원협력 위를 개최('08년 19개국)하고 베네수엘라, 남아공 등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석유공사 대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산규모를 2012년까지 30만b/d('07 5만 b/d)로 확대키로 했다. 유공사 대형화방안 실현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약 7%p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6. 국제사회에서도 고유가대책 촉구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을 잡기 위해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긴급 대책의 필요성과 산유국들의 증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은 7월7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G8 정상회담 개막 하루 전인 7월6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별도 회동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치솟는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7월7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회견에서 “신흥시장의 석유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산유국들이 증산해야 할 것”이라면서 G8 회원국들이 증산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역시 7월6일자 이탈리아 안사통신 회견에서 “G8가 석유 투기를 제한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7일 개막하는 G8 정상회의에선 고유가 대책으로 석유 증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G8 정상들은 9일 발표할 공동 성명서에서 “급격한 원유가격 상승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히고, 산유국의 증산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AP통신은 7월6일 “이번 회의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어느 나라 정상도 초대되지 않아 증산 요구 외에 다른 실질적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비판적으로 전망했다.

G8 정상들은 원유 시장에 대한 투기자금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과 “원유시장에 유입하는 투기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공개 강화”라는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자금 문제의 경우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수요 급증이 급등 원인”이라는 미국과 “투기자금의 원유시장 유입이 적지 않은 원인”이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간의 시각차가 맞물리면서 막판까지 입장 표명 수위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차킵 켈릴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최근 “달러 가치 하락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향후 수주 사이에 더욱 상승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알제리 석유장관인 그는 현지 언론인 알제리아뉴스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유가가 향후 수주간 다시 오를 것”이라면서 “달러 가치가 1% 하락하면 국제유가가 4달러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투자확대를 막았던 것처럼 경제 제재가 이란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정불안으로 이라크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